

보도시점 (온라인) 2025. 1. 14.(화) 16:00
(지면) 2025. 1. 15.(수) 조간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는 1월 14일(화)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현장 중심으로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지원의 틀을 정립했으며, 디지털에 기반한 정부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다만, 극한 기후·복합재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안전 위협, 초고령 사회 진입·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대응, 급변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요구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평온한 일상 영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2025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은 ①‘국민안전’, ②‘지방시대’, ③‘디지털정부’ 핵심 3대 분야별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담고 있으며, ④‘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또한 비중있게 포함하고 있다.

< 2025년 주요 추진과제 >

안정적 국정운영 과제

핵심 정책과제



국민안전

어디서나,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는 국민

- 1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
- 2 겨울철~여름철 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 3 안전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 4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확립
- 5 사회재난 예방·관리
기능 강화



지방시대

위기를 극복하고,
골고루 발전하는 지방

- 1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 2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

- 3 소멸위기 극복 시책
강화
- 4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
- 5 민선 지방자치 30년,
미래 발전 토대 강화



디지털정부

디지털로 혁신하고,
미래 기반을 다지는 정부

- 1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성 확보
- 2 안정적인 정부 조직
관리·운영 뒷받침

- 3 AI 전면 도입·활용
기반 마련
- 4 편리한 디지털서비스
확대
- 5 저출생·저성장 극복
적극 지원



사회통합

- 1 광복 제80주년 계기 국민 화합 건인
- 2 따뜻한 공동체 조성
- 3 발전적 과거사 해결

1. 국민안전: 어디서나,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는 국민

< 안정적 국정운영 과제 >

대내외적 정책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①재난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대응하며, ②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재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중대본 가동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 겨울철부터 여름철까지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과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한다.

<겨울철~여름철 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겨울철	△ 소형 제설장비·자동제설장치 등 제설 인프라 확충 △ 5대 대설 피해 유형(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 집중 점검 △ 안전 약자 한파피해 예방활동* 및 화재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 생활지원사(약 3.5만명), 이·통장(약 10만명) 등 활용 / ** 요양병원, 숙박시설 등 △ 설연휴 교통·화재·응급진료 등 분야별 대책 사전점검 및 실시간 상황관리·공유
해빙기	△ 해빙기 붕괴·전도·낙석 등 취약시설(도로·사면·건설현장 등) 집중점검 및 응급조치(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등)
봄철	△ 영농부산물 조기 파쇄 등 산불 위험요인 최소화 △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25년~) 및 상습 가뭄재해지역 개선사업 지원
여름철	△ 인명피해 우려 3대 분야(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중심으로 피해 저감 시설 지속 확충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신규사업 대폭 확대('24년 18개소 → '25년 35개소)

< 핵심 정책과제 >

③ 안전 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어린이 안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먼저' 캠페인을 식품·제품안전 등 다른 분야까지 확장한다. 보행 앱을 시범운영('25.5월)해서,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위험경고 메시지를 표출하고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어르신 안전) 어르신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종류별(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안전수칙을 제작·배포하고, ‘시니어 승강기 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안내하고, 대피도우미를 어르신과 1:1로 지정해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한다.

* 최근 5년간('20년~'24.9월) 만 65세 이상 승강기 안전사고 1,507건

** 방송 내용을 문자로 입력하면 음성변환을 통해 개인별 전화, 문자 등으로 전파

(외국인 지원) Emergency Ready 앱의 재난문자 제공 언어를 기존 5개(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에서 19개까지 확대*(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25.8월) 한다. 위급상황 신고앱 ‘긴급신고 바로’는 외국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홍보를 강화한다.

* 모국어 수신 가능 외국인수 : ('24년) 174만명(70%) → ('25년) 241만명(96%)

(재난피해자 지원) 현장의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재민을 위한 표준 구호식단을 개발하고, 일시(1~2일) 대피용 구호세트*를 제작·보급한다.

* (현행) 응급구호세트(담요·간소복·바닥매트 등 19개 품목, 15만원 상당)만 제작

→ (개선) 일시구호세트(칫솔·모포·수건 등 6개 품목, 2만원 상당) 추가 제작

또한, 지자체별 임시조립주택 수급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시주거시설은 다양한 형태(기숙사·연수원·숙박시설 등)로 제공해서 이재민 주거 불편을 최소화한다.

④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확립

(지역현장 역량 제고) 청년자율방재단* 전국 확산 등 지자체-읍·면·동-민간(이·통장 등) 협업을 강화해서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현장 작동성 높은 재난관리 조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구 단위 재난안전 조직 운영방안도 제시한다.

* 전주시, 전주대·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민·관 협업·구성('24년 전북 전주 시범 운영)

(신속한 상황 전파·공유) 112·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25.하반기 시범운영)해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지원한다. 재난문자는 글자수를 확대(90→157자)해서 자세한 재난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지하철도 침수 및 출입차단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표출해서 차량 운행 중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업체 협의)한다.

*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으로 소방·경찰·해경 상황실과 지자체 상황실 연계

(드론 본격 활용)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행안부, 국토부, 과기부, 소방청, 경찰청 등)하고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드론과 SAR**를 활용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도를 분석하는 기술도 개발(R&D, '25년~'28년)한다.

* 드론 관련 제약요인(사전승인 및 야간 운행 제한, 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 해소 필요

** 합성 개구 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레이더 신호로 지표면 이미지를 생성

⑤ 사회재난 예방·관리 기능 강화

(법·제도 개선) 예측이 곤란한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가칭)사회재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 (주요내용) △ 책임기관장에게 사전대비태세 확립·유지의무 부여, △ 유형별 재난대책 기간 운영, △ 행안부장관의 재난 유형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위험요인 발굴·대응) 복합재난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분석(보고서 발간 등)하고, 재난원인조사체계를 상시 예비조사체계로 전환('25.하반기)해서 조사 기간을 줄이면서(3개월 내 완료) 전문성은 강화*한다. 현장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은 단기간에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R&D 구조를 개편**('25.하반기)한다.

* (현행) 예비조사 시 공무원 중심 5명 내외 참여 → (개선) 민간전문가(2~3명) 추가

** (현행) R&D 과제 사전기획 필요 → (개선) 적시 필요한 기술개발과제 자체 선정

2. 지방시대: 위기를 극복하고, 골고루 발전하는 지방

< 안정적 국정운영 과제 >

심화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재정을 총괄 지원하는 부처로서 ①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②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적극 나선다.

정기·수시 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수렴·관계부처와 함께 해결하고, 지방에서 국가 정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60.5%, 약 170조원)해서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지방계약·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

신속 집행	△ 상반기 신속집행 최고 수준 목표 설정(60.5%, 약 170조원) △ 2025년 1분기 집행목표 별도 설정, 특교세 인센티브 역대 최대 지급,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적 집행관리
물가 안정	△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및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 분산·연기 △ 지자체별 공공요금 현황·내역 분석 및 공표
계약 규제	△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대금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 특례 연장(~'25.6월)을 통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 △ 생활편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관련 지방규제* 중점 정비 * 자치법규 상 가설건축물 허가,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 등

< 핵심 정책과제 >

③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 강화

(지방소멸대응기금 내실화) 기금 투입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배분·운용*하고 다년도 사업의 안정성과 집행률**을 높인다. 지역 특화사업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 (기존) 투자계획, 신규사업 발굴 중심 → (개선) 기금 투입 효과·성과 중심으로 배분

** 기금관리 시스템('25.5. 개통 예정)을 통해 기금관리조합의 실시간 집행 모니터링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의 연계를 확대*해서 기부 편의성을 높이고, 세액공제 확대 등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1차(기업은행·국민은행 등 7개社, 2024.12월~) / 2차(5개社, 2025.6월~)

(**빈집 정비 활성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25.3월)하고, 빈집 현황·생애 관리 등을 위한 빈집 정보 플랫폼을 구축(’25.상반기)해서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빈집 철거 지원사업 확대(’24년 50억 원 → ’25년 100억 원), 세제지원 추가 발굴·협약, 철거 후 공공활용 조건 완화 등 추진

(**지역기업·청년 지원**) 기업과 인구감소지역의 특산물을 연계한 협업제품을 개발(’24년 부여 알밤, ’25년 영양 고추 등)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기업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인구활력펀드(행안부·중기부 출자, 200억원 규모)를 활용해서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금을 공급하고, 지역의 이전기업 유치를 지원(’25.상반기)한다. 청년의 지역탐색과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12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 주도 로컬 비즈니스 공간* 조성(’25년 15개소)도 추진한다.

* 창업교육·컨설팅, 사업자금 및 금융 지원 등(중기부 협업)

(**특수지역 지원**) 접경지역에 민방위대피시설을 확충(2025년 4개소)하고, 평시에는 경로당·여가·문화시설로 활용해서 주민 안전 확보와 복지증진을 동시에 도모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25.5월)해 오물풍선, 대남 방송 등 북한의 도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완비한다.

또한, 섬 지역에 마을단위로 LPG 연료 공급망을 구축(’22~’26년, 총 4,200세대)하고,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23~’27년, 총 250억원)한다. 서해5도 주민에게는 정주생활지원금을 확대*·지원한다.

* 2024년 월 최대 16만원 → 2025년 월 최대 18만원

④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

(지방재정 안정화) 세수(국세·지방세) 증감 등 재정 상황변화에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적립 의무화(지방기금법 및 지방회계법 개정), 기금 성과분석 강화 등 지방재원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공유재산 관리 강화) 공유재산 총조사(공유재산대장-공적장부 일괄 대조)를 통해 숨은 재산을 확인해서 지자체가 누락없이 공유재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가 없게 된 유휴재산은 주민에 공개하고 이용을 활성화(대부·매각, 폐교재산 활용 등)한다.

(지방공공기관 효율화) 통폐합 및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강화* 하며, 사업별 예산제를 도입해서 사업 성과를 빈틈없이 관리한다.

* 기초 지자체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기관을 지방연구원에서 전문기관으로 변경

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미래 발전의 토대 강화

(행정체제 개편)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25.1월) 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재정·세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권한 이양 확대, 의회 활성화 등 /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25.상반기)도 추진한다.

* 3대 세입(교부세·지방세·보조금) 및 재정제도(지방채·투자심사 등) 특례 적용 검토

(특화된 자치권 보장) 시·도 단위로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 스스로가 원하는 특례를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면 심의·의결하는 ‘상향식 특례부여 제도’ 신설을 추진(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25년)한다.

(생활인구 활용 확대) ‘생활인구’(주민·외국인 등 등록인구+ 체류인구)를 지방 소멸대응기금 평가, 보통교부세 산정 등에 적용해서 활용성을 높이고,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 생활인구 통계항목을 지속 고도화하여 지역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 분석·제공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2025년에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선언하는 등 미래 지방자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한다.

※ 30주년 기념식, 평가 연구용역 및 국제 컨퍼런스, 권역별 간담회 개최

3. 디지털정부: 디지털로 혁신하고, 미래 기반을 다지는 정부

< 안정적 국정운영 과제 >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방식 제공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중단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내외 여건에 관계없이 정부가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기능의 유지가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와 정부조직, 의정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①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②안정적인 정부조직 관리 및 운영을 뒷받침한다.

디지털행정서비스 상황 통합관리로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장애관리 계획 수립·매뉴얼 시행 등 범정부 장애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금년도 정기 직제 증원분 90% 조기 배정, 국가 의정관리 철저 등 안정적 정부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성 확보>

신속한 상황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안전상황실(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통한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디지털행정서비스 상황 통합 관리 △ 민관합동(민간 전문가 Pool 활용)으로 신속 조치
장애 관리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장애관리계획 수립, 예방·점검 등 범정부 관리체계 강화 △ 대규모 정보시스템 장애 대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시행(‘25.1.17.~) 및 기관별 실무매뉴얼 수립(~’25.4.)
지자체 사이버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침해 신속 대응을 위한 행안부·지자체 위기 대응체계 강화* * 통합매뉴얼 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전 접속차단 조치 매뉴얼화 등

< 핵심 정책과제 >

③ AI를 전면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

(추진기반 구축)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공공부문이 일하는 방식 개선, 대민서비스 혁신, 사회문제 해결에 AI 활용도를 높이도록 ‘공공부문 AI 대전환(Gov AX) 종합대책’을 수립(’25.상반기)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도 추진*한다.

* △AI 활용 저해 사전평가, △AI 리터러시 활용 촉진, △AI 영향평가·윤리원칙 등

(AI 활용 시스템 도입) 기관별로 AI를 도입할 때 우려되는 불필요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구축한다. 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25년)·AI 공통지원서비스(’25.하반기)등 AI를 활용하는 각종 시스템도 구축한다.

* ISP 수립(’24)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5) → 범정부 AI 활용 서비스 확대(’26)

(데이터 활용 촉진) 기관별로 분산된 AI 학습용데이터를 수집·축적(25만건)하고,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5년)한다.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지 않던 다양한 유형의 비정형데이터*(이미지, 텍스트 등)와 재현데이터 방식(원천데이터와 유사한 패턴의 가상데이터)을 활용한 데이터 개방도 지원한다.

* 리걸테크 데이터(재결례, 법령해석 사례 등), 연구개발 데이터, 융복합 데이터 등

(AI 리터러시 강화) 대상별(관리자, 실무자, IT담당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공무원 직급별 교육과정에도 AI 활용 교육을 반영(인사처 협의)한다.

④ 편리한 디지털서비스 확대

(모바일 신분증 확대) 2024년 12월부터 9개 지자체(세종, 강원 홍천, 경남 거창, 전남 여수 등)에 시범 도입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통*(’25.1분기)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발급한다.(’25.1월, 법무부 협업)

* 민간 앱 발급·이용(~’25.上, 네이버·카카오 등 5곳) 및 생활 속 활용처 지속 확대
(온라인홈택스, 고용24 등, 오프라인(주민센터)인감증명 등 23종 서비스 신원확인)

(서류 없는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는 금년도에 900개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사업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25.하반기)한다.

* ('24) 421개 → ('25) 900개 → ('26) 1,498개 공공서비스까지 확대

** 공공고용장려금(고용24), 민간은행 여·수신 서비스 등 시범서비스 개시

(맞춤형 혜택알림) 개인 상황 및 자격요건 변화를 분석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점차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나간다.

* (현행) 청년·구직·이사·출산 등 4대 분야 약 1,100종 서비스('25.1월~) →

(확대) ①양육, ②가구구성 변화, ③중·장년/노인 등 3대 분야 1,200여 종 추가

※ 2개 민간앱 시범 개시('25.1.) → 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민간앱 순차 개통('25.下)

(원스톱 서비스) 국민이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를 구축('25.상반기)한다. 국민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도 확대('24년 24종 → '25년 58종)한다.

* 5개 기관(국세청·교육부·복지부·고용부·대법원) 40종 서비스(육아휴직 급여신청, 학교 생활기록부 발급,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등)를 직접 제공

⑤ 저출생·저성장 극복 적극 지원

(저출생 대응 지원)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정부조직법 개정)하고, 부처별로 인구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보강한다.

또한, 보통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항목을 신설한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감면*도 확대한다.

* (위탁 직장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100% / (어린이집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3대 분야 산업 지원) ①재난안전산업 내수 시장에 집중된 영세한 재난안전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국외 안전분야 박람회 등 통합한국관 운영을 확대(연 1회, 30개사 → 연 2회, 50개사)하고, 재정 확보를 지원*해서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 공제조합 설립,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업을 통한 우대 확대방안 검토 등

또한, ②주소정보 로봇·드론을 활용한 주소기반 신산업 확대*와 ③디지털정부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국내 기관 및 디지털정부 사업체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 주차장(면) 주소정보 구축, 도서·산간 드론배달점 설치, 시설 출입구정보 등록 등

** (디지털정부협력센터) 페루 등 8개 국가에 공동협력사업(30여 개) 수행
(기업 지원) 기업 소통창구 상설 운영으로 사업정보 공유, 입찰절차 안내

4. 사회 통합

(광복 80주년 계기 국민 화합 견인) 2025년 광복80주년 경축식을 광복의 의미와 국가 정체성을 되새기는 ‘국민화합의 축제’로 개최*한다. 편의점·대형마트 등 태극기 판매처를 확대하고, 창문부착형·차량형 등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를 홍보한다. 또한, 국가상징을 모티브로 다양한 디자인을 발굴·공유한다.

* 청년층 초청 확대로 관심 제고 및 참신한 참여프로그램 개발 추진

(따뜻한 공동체 조성) 온기나눔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사회단체*와 협업해서 지방소멸·고령화, 재난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과 연계한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착한 기부자상’은 ‘착한 기부대상’으로 개편해서 포상규모 및 대상을 확대한다.

* 새마을 지역공동체 실현 운동, 바른문화 확산 국민운동 등

** 「자원봉사법」 개정, 민·관 시스템 연계, 통합 모바일 자원봉사증 개발 등

또한, 외국인 주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의 특성과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주민-지역주민 공유 생활인프라(공동육아, 문화체험 등) 구축도 추진한다.

(발전적 과거사 해결) 제주4·3사건 희생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연행·수배·구금자 등 8차 보상 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지속 추진한다.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일본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추진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분석해서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국립트라우마센터 치유서비스 제공,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등 아픈 과거사를 치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한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5년은 대내외 환경변화, 저출생·지역소멸위기 지속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중추 부처로서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총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성민 (044-205-1401)
		담당자	서기관	박정일 (044-205-1402)
<안전>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유지선 (044-205-4110)
		담당자	사무관	이민규 (044-205-4111)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응범 (044-205-5110)
		담당자	사무관	백승준 (044-205-5111)
	사회재난실 사회재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승진 (044-205-6110)
		담당자	서기관	남송희 (044-205-6111)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준동 (044-205-5310)
		담당자	서기관	김종성 (044-205-5311)
	비상대비정책국 비상대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효식 (044-205-4310)
		담당자	사무관	이광태 (044-205-4314)
<지방>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책임자	과 장	오준혁 (044-205-3101)
		담당자	사무관	이동현 (044-205-3102)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경 (044-205-3702)
		담당자	사무관	홍성우 (044-205-3703)
<디지털>	디지털정부실 디지털정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조진상 (044-205-2702)
		담당자	사무관	송동근 (044-205-2707)
	조직국 조직기획과	책임자	과 장	태병민 (044-205-2301)
		담당자	사무관	김성순 (044-205-2302)

참고

2025년 주목할만한 행정안전부 시책 11선

1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폭 확대(~'25년) △ 2024년 18개소 → 2025년 35개소로 종합정비사업 신규 지구 확대
2	외국인을 위한 재난문자 제공언어 확대('25.8월) △ 5개(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 19개(러시아어·프랑스어·아랍어 등, '25.8월) △ 모국어 수신 외국인수: 2024년 174만명(70%) → 2025년 241만명(96%)
3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민간 플랫폼 연계 확대(7개社 1차 개통, '24.12월 → 5개社 추가 개통, '25.6월~) △ 개인별 연간 기부한도 500만원 → 2,000만원으로 상향('25.1.1.~) △ 세액공제 확대 등 검토
4	시·도 단위 '상향식 특례 부여 제도' 신설(~'25년) △ 시·도가 이양을 원하는 특례를 중앙에 건의하면 특례 심의·의결 및 법령 개정
5	기업과 인구감소지역 특산물을 연계한 협업제품 개발(계속) △ '24년 행안부-롯데 웰푸드-부여군 상생 협약으로 부여 밤 활용제품 출시(완판) △ '25년 영양 고추, 보성 녹차 등을 활용한 지역 상생제품 발굴
6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마련('25.3월), 빈집 정보 플랫폼 구축('25.상반기) △ (종합계획) 정비체계 구축, 빈집 정비 지원 확대,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 △ (플랫폼) 국민에게 빈집 현황·매물정보 제공, 빈집 생애 관리 업무 지원
7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전면 개통('25.1분기) △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5개 민간 앱으로 발급·이용('25.상반기) △ 홈택스, 고용24, 인감증명 등 23종 서비스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확인
8	'혜택알리미' 서비스 확대(~'25년) △ 개인 상황·자격요건 변화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먼저 안내해주는 서비스 △ (현행) 청년·구직·이사·출산 등 4대 분야 약 1,100종 서비스('25.1월~) (확대) ①양육, ②가구구성 변화, ③중·장년/노인 등 3대 분야 1,200여 종 추가(~'25년)
9	가칭「공공부문 AI 대전환(Gov AX) 종합대책」 수립('25.상반기) △ 공공부문 AI 역량 강화, AI 활용 확산, AI 인프라 구축 등

10.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 △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발표('25.1분기)
- △ 30년의 성과 및 한계 평가, 지방자치 미래비전 선언 등
- △ 연구용역, 국제 컨퍼런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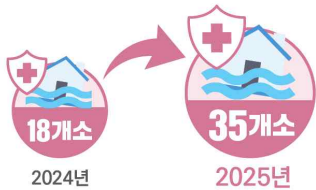
11. 광복 80주년

- △ '국민화합의 축제'로 경축식 개최
- △ 태극기 판매처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 홍보
- △ 국가상징을 모티브로 다양한 디자인 발굴·공유

2025년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시책 11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대폭 확대

종합정비사업 신규 지구 확대



외국인을 위한 재난문자 제공언어 확대('25.8월)

'24년 5개 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 '25년 19개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민간플랫폼 연계 확대
- 개인별 연간 기부한도 상향 500만원 → 2,000만원
- 세액공제 확대 등 검토



'상향식 특례 부여 제도' 신설

사·도가 이양을 원하는 특례를 중앙에 건의



기업과 연계한 인구감소지역 특산물 홍보

기업과 인구감소지역 특산물을 연계한 협업제품 개발



체계적인 빈집 관리

-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마련('25.3월)
- 빈집 정보 플랫폼 구축('25.상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개통('25.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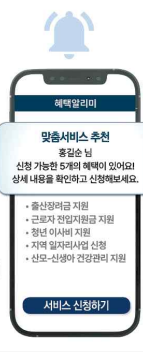
-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앱에서 발급·이용
- 홈택스 등 각종 정부서비스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확인 가능



혜택알리미 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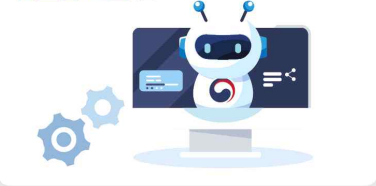
개인별 상황과 자격을 분석하여 공공서비스 맞춤형 안내

- 약 1,100종 서비스('25.1월~)
- 약 1,200종 서비스 추가('25년)



'공공부문 AI 대전환(Gov AX) 종합대책' 수립('25.상반기)

공공부문 시역량 강화, 시활용 확산 등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발표(~'25.1분기)
- 30년의 성과 및 한계 평가, 지방자치 미래비전 선언 등



광복 80주년

- '국민화합의 축제'로 경축식 개최
- 태극기 판매처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 홍보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민안전

어디서나,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는 국민

안정적 국정운영 과제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



겨울철~여름철 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핵심 정책과제



안전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확립



사회재난 예방·관리
기능 강화

지방시대

위기를 극복하고, 골고루 발전하는 지방

안정적 국정운영 과제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

핵심 정책과제



소멸위기
극복 시책 강화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



민선 지방자치 30년,
미래 발전 토대 강화

디지털정부

디지털로 혁신하고, 미래 기반을 다지는 정부

안정적 국정운영 과제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성 확보



안정적인 정부 조직
관리·운영 뒷받침

핵심 정책과제



AI 전면 도입·활용
기반 마련



편리한 디지털서비스
확대



저출생·저성장 극복
적극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